

# 與 “오염수 괴담 국론 분열” vs 野 “일본 두둔”

### 與 “괴담 피해, 국민에게...IAEA 검증 결과 믿어야” 野 “여사이비 과학으로 국민 우려 매도...이윤배반적”

여야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괴담으로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비판하며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정확한 자료 없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단언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광우병 사태와 사드 전자파 논란을 거론하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홍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방류는 반대”라면서도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6년 사드 전자파 논란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괴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던 적이 있는데도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의원은 “(2011년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그때부터 한 12년 간 희석되고 지금도

되고 있는 거로 봐야하지 않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검증 결과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선 해류상 거대한 장벽에 처져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겠다”며 “이로 인한 수산·어업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며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 질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이비 과학’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매도하고 풍개려 하는데 이런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답변과 합리적인 대책으로 납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우리 해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를 했다”며 “아직 방류도 안 했고, 방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내용도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정부가 ‘안전하다,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단언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방출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해수부나 또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해서 안전하다고 단언하느냐”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현재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검증을 제대로 해 안전하게 보고드릴겠다’ 이게 정답”이라고 질타했다. /뉴시스

## “광주 복구, 폐기물 처리업체 독과점 의혹” “편중 막아야”...신정훈 의원 ‘수의계약총량제’ 도입 제안

광주 복구의 시설 폐기물 처리 업무 관련 수의 계약이 특정 업체 3곳에만 편중된다는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복구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사업 수의계약이 3개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은 “구청 누리집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설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해 업체 3곳이 총 410건·32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A업체(173건·14억 7000만 원), B업체(110건·9억 5000만 원), C업체(127건·8억 5000만 원)가 수의계약을 맺었다.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총 계약액이 크고 횟수가 많아 특정업체 몇 곳이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설폐기물 처리업체가 3곳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안다.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더 많은 영세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자 실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 또는 편중되는 것을 막고자 업체당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복구 관계자는 “광주 지역 내 시설폐기물 처리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 관급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보관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특별성 계약 또는 일감분할주거 의혹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도기 기자

## 민주, 혁신기후 출범 첫번째 의제는 돈봉투 사건



‘김은경 호’ 더불어민주당 혁신기후가 20일 본격 출범했다. 혁신기후는 첫번째 의제로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오 고갔다는 의혹인 ‘돈봉투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 혁신기후 수장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혁신기후 1차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이후 국회의원이나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첫번째 의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50차 시도대표 회의. 이날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에서 김두겸 시장, 최봉환 대표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주 ‘가계부채·전세사기’ 38대 민생 입법 추진...기구체 설치도

### 민주연구원·을지위 ‘38대 입법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계부채·전세사기·소상공인 지원·고용 안정 등과 관련한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기구체를 설치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에서 “오늘 38대 정책 입법과제를 제안받게 됐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지원해 최선을 다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이 대표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뤄

졌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을지위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위)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38대 주요 과제를 선정, 제안서로 정리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안서를 전달받기 앞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는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민생 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고, 최근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제안했지만 여당 측 반응이 영 시원찮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 입법 문제는 사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현장에서 보면 진척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박광운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는 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점 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매우 내실있고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생입법 추진 기구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가계부채·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특수고용노동자·문화콘텐츠창작자·돌봄노동자)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정리됐다. 민주당은 각 과제별 책임위원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

## “전남도,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구제해야” 정의당 ‘훈령 발령한 날 시행’ 규정 개정안 “구제 못해”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20일 전남도가 행정예고한 소송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이 현재 진행 중인 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의 개정 훈령안은 ‘훈령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의 소송 비용 청구사건을 적용 대상으로 제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전남도의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유사하다”며 “현재 남도학숙 피해자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피해자는 기나긴 8년 소송에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다”며 “전남도과 광주시는 남도학숙 피해자의 소송 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로부터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이후 남도학숙은 소송에 지고도 A씨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에 위치한 남도학숙은 수도 권으로 대학을 다니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광주시·전남도가 1994년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 민주당 전남도당 박정식 신임 사무처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신임 사무처장에 박정식(58)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 실장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신임 사무처장은 전북 무주 출신으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14년 간 민생 정책입법 과제 수행과 전국 순회 정책엑스포 등을 추진해 왔다.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당의 정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처장은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도당이 지역민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지역 현안 파악과 정책 개발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바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연설서 민주·文 12번 언급...책임론 부각

### “보수의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다시 뛰게 만들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전 대통령)’을 10번 넘게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을 5포 정권(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으로 규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민주당의 공세를 괴담, 가짜뉴스, 선전선동으로 규정하고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꾸짖어달라고도 국민에게 호소했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맞서 ‘거야 심판론’을 내세우기 위한 단초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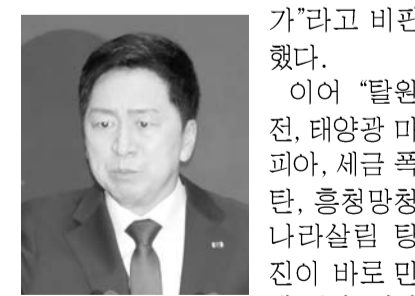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장에서 53분 가량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섰다.

연론에 사전 배포한 연설문은 A4 용지 32장, 1만2000자에 달한다. 김 대표는 대표연설 내내 격정적인 목소리로 야권을 비판했고 야당 의석에서는 날선 고성어연신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꾀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탈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주성 실험으로 지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인



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홍충당청나라살림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며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자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했다.

그는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변화로 ▲노동개혁 ▲조세개혁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호매민평 이태헌

**슬그머니**

바람쐬고올테니 알아서잘애  
해이소방!! 프랑스베트남 GOGO  
대한민국1호

태헌